투데이 칼럼

원전사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전 민 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 팀장

원전사고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원전사고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냉철한 집단 지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우리 지역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나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존본능에 따라 사고지점으로부터 멀리 삼십육계 줄행랑(?)을 쳐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피에 앞서 사전에 갖추거나 생각해 보아야 할 집단지성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사고발생시 방사능 특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사능은 무색·무취 등의 특성이 있어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인지했다는 것은 이미 피폭을 당하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방사능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풍향의 직각 방향으로 멀리 대피해야 한다.

둘째, 원전 사고는 국가 운명공동체 차원의 위기 극복정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원전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넓은 범위의 대형사고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고의 특성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주민소개로 확대 정비와 주민 운송수단 확보, 구호소 운영 등이 필요하다.

또한 몸소 확인이 불가능한 방사능의 특성을 감안하면 국가 방사선 비상체계에 따라 발령되는 경보방송 만이 주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라는 것이 안전에 있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정보로서의 효용가치는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원전사고시 정보 왜곡은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다. 이러한 폐단에서 오는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상경보시스템이 원전사고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 뿐만 아니라 지원정책과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도 평상시 신뢰 구축에 매진하여야 한다.

공동운명체인 우리 국민들 역시 원전산업 분야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만 한다.

셋째, 비상시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정신이 더욱 요구된다는 것이다.

마을 단위 방사능방재 교육 때 간혹 "내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도망가면 뭐하겠노. 여기를 떠나지 않으련다"라고 말하는 어르신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외지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주변사람에게 걱정을 끼치고, 오염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재해약자 구조활동을 전개하는 요원들에게도 많은 부담을 주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소개 비상경보가 발령되면 차량이 있는 주민이나 없는 주민 모두 마을회관 등 집결지에 모여야 한다. 그리고 차량이 없는 사람을 보면 누구든 최대한 태우고 신속히 빠져나가야만 한다.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문명사회에 살고 있다. 복잡한 현대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하다고 하는 원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딜레마 속에서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평상시 '신뢰와 배려'라는 집단지성의 힘을 키워 원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사능의 위협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 설

귀농 청년들 농촌의 보배로 키워야

전북도가 농도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뛰고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다. 우선 스마트 농생명 산업에 대한 즐기찬 포부가 그렇다. 스마트 농생명 산업을 대통령의 전북 공약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 또한 든든하다. 무슨 현안이고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때마침 귀농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것 또한 반가운 일이다. 지난해 귀농 인구가 1천361 가구로 그 전년도와 비교해 100여 명이 늘어난 것은 전북 농업의 앞날을 밝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따라서 더욱더 농업 발전 의지를 다져야겠다. 농가의 소득 증대를 주요 현안으로 끌어올려 반드시 성취시키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나가야 한다. 현재까지 전북도는 그것을 잘 해내고 있지 싶다. 영농 정착 지원사업에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음은 전북도의 정책이 신뢰와 공감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귀농 청년들을 농촌의 보배로 키워야 한다. 그것도 한시적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래야 한다. 그러면 전북의 인구가 존속되거나 증가하는 쪽으로 힘을 받을 터이다.

도지사는 최근에 "전북의 미래 먹거리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농생명 산업"이라고 말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대답이 나왔다는 것은 도지사가 늘 그걸 생각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활성화는 서두에 언급한 바 그대로 문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북도민에게 말했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북도는 스마트 농생명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12개 핵심사업과 그 투자 규모를 밝혔을 터이다. 그 스마트 농생명 산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우리 전북 지역의 분위기가 달라지리라는 기대이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이 웰빙 고장이라고 여러 차례 공표해왔다. 그런데 웰빙 고장의 조건은 소득이 말을 하게 돼 있다. 우리 농촌 지역의 총소득은 전국과 비교해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고 힘을 쏟는 주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전북도가 귀농 젊은이들을 챙기는 것은 농가의 소득 증대의 바탕 위에서라야 한다. 그래서 여기 또다시 강조해 당부한다. 전북도는 귀농 청년들을 전북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보배로 키워야겠다.

저출산 대책이 너무 늦다

전북도의 저출산 대책이 너무 늦다. 올해 연초에 있었던 보고가 생각난다. 그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으니 지금 다시 생각해도 기막힐 노릇이다. 그것은 저출산 문제를 방관해 왔다는 고백이나 다름이 없다. 그동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게 다 변명을 위한 보고였던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지역의 오랜 숙제였음에도 그동안 어떻게 해결해보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북도의 저출산 대책이 너무 늦다. 관계 전문가들과 간담회의체를 만들고 핵심과제를 선정해 그 이후에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이것은 늑장이라도 보통 늑장이 아니다. 정말이지 이대로는 지역의 앞날이 어둡다. 저출산의 고착화 때문에 '데드 크로스'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이다. 사실이지 데드크로스 현상은 이미 2016년부터 있었다.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많아야 맞는데 우리 전북의 경우는 그게 아니다. 도내 인구 감소 폭이 전국과 비교해 세 일 컫다는 보도가 여러 번 있었거니와 출생아 수가 하락 없이 줄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전북도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불만은 그 근거가 없지 않다. 전북도는 다른 광역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수 배워야겠다. 출산 문제가 이웃보다 덜 심각한 다른 광역시도들도 5개년 출산 정책안이며 출산 장려 추진단을 조직하는 등 출산 캠페인이 활발하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전북도는 기존 대책 그대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비교가 된다. 전북도는 저출산 문제를 심상하게 여겨선 안 된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능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오늘이다.

아이낳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보다 지원 높은 출산 장려책을 내놓아야겠다. 전북도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2백만 도민을 운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84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팩트이다. 출산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중에 고령화 고착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예전에도 지적했거니와 거주 인구의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계속 늘고 있는데 신생아 울음소리는 어쩌다 드물게 들고 있으니 말이다.

독자제언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휴가 보내기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은 여름철 피서를 즐기기 위해 바닷가 또는 계곡으로 향하고 있다. 여름철 피서를 떠나기 전에는 물놀이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확인해보고, 장소별로 물놀이를 위한 안전수칙을 알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사람이 없는 저수지나 계곡은 물살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사람들의 발걸음이 적은만큼 환경상 위험요소가 많고 익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자녀가 물놀이를 하고 있을 때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곡이나 피서지를 갔을 때 어른들은 술이나 음식을 먹고 있고 아이들은 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할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한다.

셋째, 물놀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물놀이하기 전 안전수칙을 교육하여야한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보호자가 함께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하여야하며, 꼭 신발을 신어야한다. 간혹 날카로운 조개껍데기, 깨진 유리조각으로 밟으면 발을 다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휴가를 가기 전에는 간단한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구급함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놀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물놀이 장소에서는 안전선내에서 활동하되,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여 모두가 행복한 휴가를 보내자.

이건우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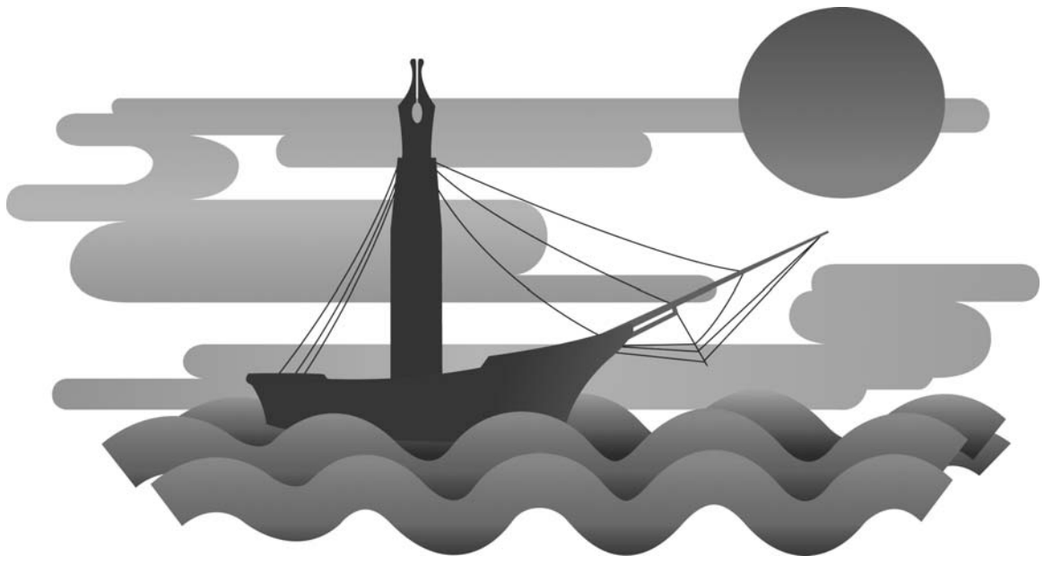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 연방대법관에 캐배너 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연방 대법관에 브렛 캐버너 판사를 지명한 후 캐배너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